

충남리포트 제131호

ChungNam Report

2014. 10. 02.

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

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, shahn@dju.ac.kr

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, hkkwak@dju.ac.kr

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규범적·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, 국내·외 사례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의 실천모형과 전략을 제안함

요약

- 충청남도는 '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'라는 비전을 세우고, 다양한 제도 실험을 모색하고 있음
-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단위를 '동네'로 보고, 다양한 동네거버넌스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
- 우리의 경우 동네규모, 동네단위 지역사회(공동체) 형성 및 대표와 주민 자치와의 관계 등에 충분한 이론적 검토 없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책 들을 정부부처별(예: 마을만들기) 또는 정부수준별(예: 중앙의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, 충남의 4대 주민자치 모형) 상호 연계성 없이 독자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
- 동네 규모에 따라 '민관협치형' 주민자치와 '자율형' 주민자치의 이원적 접근과 연계노력이 필요함
-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, 동네발전기획, 조기고지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함
- 자율형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부처별 마을만들기사업의 통합, 상향적 주민조직화를 위한 지원 강화, 읍면동 주민자치(위원회)와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함
-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자치 제도화 실천과제로 동네주민자치 지원기구 신설, '동네자치 도민 추진 위원회' 구성, 동네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강화,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를 제안함

CONTENTS

〈 요약 〉

1. 동네를 단위로 한 주민자치
2. 동네거버넌스란?
3. 한국사회의 제도적 현실
4. 동네거버넌스 실천 전략

- 본 연구의 목적은 동네거버넌스(neighborhood governance)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규범적·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, 동네거버넌스와 주민자치에 대한 국내·외 사례분석을 통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의 제도모형 및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미흡한 분권체계 속에서 진행된 지난 20여 년간의 단체자치가 보여준 다양한 폐단으로 인해 지방정부 역량 및 자치제도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
 -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,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최우선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단위로 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노력임
 -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동네주민자치 뿌리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광역 지자체가 바로 충청남도임. 민선 5기부터 충청남도는 ‘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’라는 비전을 세우고, 다양한 제도 실험을 모색하고 있음
 - 현재 우리 사회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선진국에서는 ‘지역사회 거버넌스’(community governance)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음. 특히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단위를 ‘동네’로 보고, 다양한 동네거버넌스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, 선진국의 동네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사례 분석,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동네주민자치를 위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제도화 방향 및 실천전략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

02

▶ 동네거버넌스란?

- 주민자치는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선·공적 가치를 생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함.
- 지역사회 형성 위한 최소의 전략적 공간단위가 바로 ‘동네’(neighborhood)임
- 제도적 차원에서 동네를 논의할 때 읍·면·동 같이 행정구역을 가정하지만, 주민자치 논의를 위해서는 동네의 다중규모성(multiscalarity)을 고려해야 함. Somerville(2011)은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<표 1>과 같이 동네규모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, 각각의 규모와 관련된 특징을 <표 2>와 같이 정리함

<표 1> 동네규모 유형

| 동네규모 | 정체성(identity) | 주민 수(명) |
|------|--|--------------|
| 1 |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 (Small group of dwellings) | 500 미만 |
| 2 | 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(Smallest named settlement) | 500~3,000 |
| 3 |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(Smallest governed settlement) | 3,000~20,000 |
| 4 | 지속가능한 최소단위 정착지 (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) | 20,000 이상 |

〈표 2〉 동네규모에 따른 특징

| 동네 규모 | 특 징 |
|-------|--|
| 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웃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 형성된 정감과 호혜, 친사회적 행동 등으로 특징지어짐 - 상호작용은 공식적 조정이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음 - 동네 형태를 띠지만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|
| 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 규모의 중요한 속성은 정체성(identity)으로서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집단, 지위, 계급, 인종, 연령 등과 관련된 정체성을 통해서 매개됨 - 지역사회결사체, 동네주거조직, 소규모 스포츠동우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함 - 동네를 대표하는 조직을 가질 규모가 되며,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‘자율거버넌스’(self-governance)가 가능함 - 동네조직이 다른 동네나 더 높은 규모에서 해당 동네를 대표할 수 있음 |
| 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가 이 규모에서 학교, 치안,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 - 영국의 패리쉬·타운의회나 프랑스의 코뮌 등 지방정부의 1차 계층의 형태를 띠 - 선출직 공직자들이 동네 형성을 지배하는 ‘계층적(hierarchical) 거버넌스’의 성격을 띠 -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단위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- 최근 이 규모에서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주민조직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|
| 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장, 대학교,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되며, 동네라기보다는 도시적 성격을 띠 -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며, 세계화에 따른 도시 간 경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|

-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‘지역의 하위수준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장치들’ 또는 ‘동네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’ 등으로 정의됨

- 다양한 동네거버넌스의 유형 중 주민자치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‘자율거버넌스’와 ‘공동거버넌스’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음
 - 자율거버넌스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라면,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현상을 ‘공동거버넌스’ 개념을 간주할 수 있음
 - Somerville의 동네규모 이론과 연계해 보면, 자율거버넌스를 위한 공간의 경우 ‘동네규모 2’에서 형성되기 쉽고, 공동거버넌스를 위한 공적 공간의 경우 최하위계층의 정부가 존재하는 ‘동네규모 3’에서 형성되기 쉬움

03

▶ 한국사회의 제도적 현실

● 주민자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제도적 혼란

-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‘자율형’ 주민자치와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‘협력형’ 주민자치로 분류됨
- 자율형 주민자치 제도실험이 ‘마을만들기’라면, 협력형 주민자치 제도 실험은 ‘주민자치센터 (위원회)’ 또는 ‘주민자치회’ 시범사업임
- 자율형과 협력형 주민자치의 연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음

●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

- 마을만들기를 바라보는 주민자치 관점의 결여로 주민의 ‘마을만들기’가 아닌 정부부처의 경쟁적 ‘마을만들어주기’ 사업으로 전락
- 정부부처의 ‘칸막이식 입법화’로 현장 혼란(예: 마을기업-안전행정부, 사회적 기업-고용노동부, 협동조합-기획재정부 등)이 가중되고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
-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충남을 포함한 지방정부 노력은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정부의 실·과·소로 이어지는 견고한 ‘칸막이 행정’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함

●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

- 1999년 읍·면·동 기능전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, 운영
- 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왜곡된 주민자치센터 ‘문화센터화(化)’ 역할의 고착화
-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의 보조자, 의견제시자 역할에 불과

●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및 문제점

- 2010년 제정된 ‘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’에 근거해 추진
- 시범사업 현황 : 전국 31개소('13. 7 ~ '14.12) / 사업비 1억 원 지원
-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유사, 차별성 부족
-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예산, 모형, 표준조례 등이 중간에 반복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임

● 충청남도 주민자치사업 모형의 문제점

- 충청남도는 관련법에 근거 주민자치모형을 4개(협동조합형, 주민자치위원회형, 마을기업형, 마을공동체형)로 나누어 접근
- 중앙부처별 ‘간막이 접근’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민자치사업으로 명명했을 뿐, 관련법 외 분류기준과 주민자치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

● 부처별 관련 입법 추진에 따른 혼란 확대 가능성

- ‘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주민자치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‘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’,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‘지속가능 농어촌 마을만들기 지원법’ 등 서로 다른 부처가 주민자치와 직·간접으로 관련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새로운 입법들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함

04

▶ 동네거버넌스 실천 전략

1) 중앙정부 차원

● 동네규모에 따른 주민자치의 이원적 접근(자율형/협치형)

- 읍·면·동은 행정구역을 위한 개념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리적·인구적 측면에서 전체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, 주민의 동네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
- 동네규모를 고려하여 주민자치 모형을 이원화하여 추진해야 함

① 민관협치형 주민자치

- 행정계층이 존재하는 읍·면·동 단위에 적용
- 평균 20,000명이 넘는 읍과 행정동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주민의 참여보다는 주민대표에 의한 행정참여에 초점
-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또는 2015년 실시 예정인 주민자치회 제도와 연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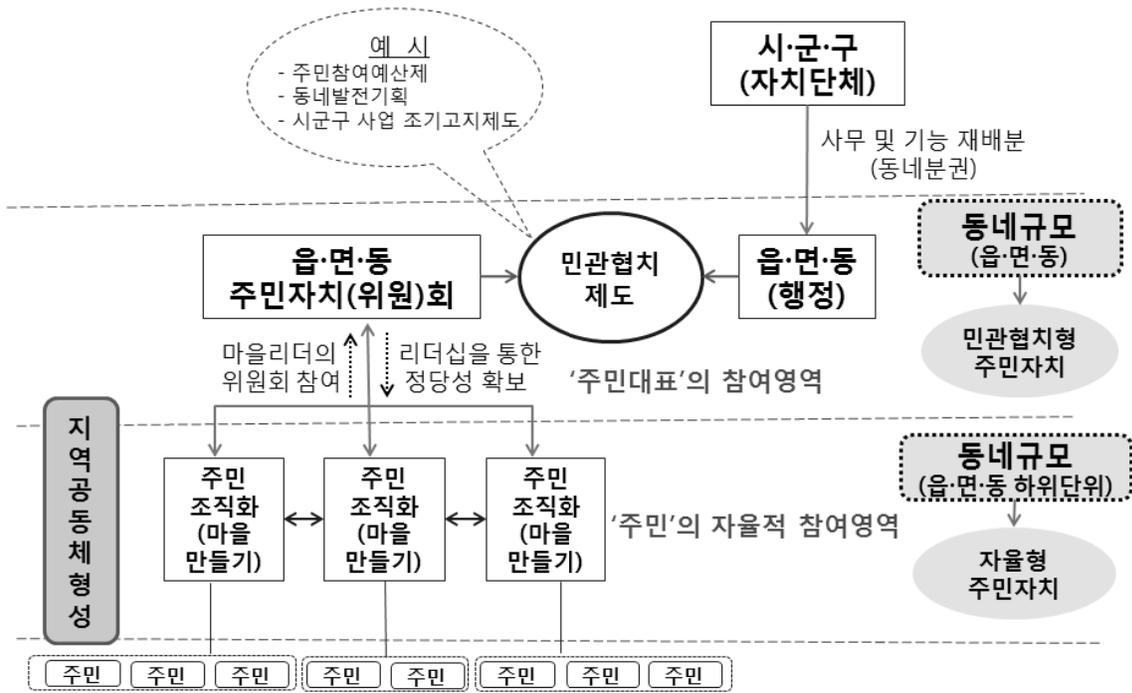
② 자율형(동네역량강화형) 주민자치

- 주민들의 일상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, 정체성 형성이 용이한 읍·면·동 보다 작은 단위 동네에 적용(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자연스런 동네 인식에 기초)
- 중요한 동네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초점
- ‘마을(공동체)만들기 조례’와 같은 제도적 지원

③ 민관협치형과 자율형의 연계

- 자율형(마을만들기) 리더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적극 유도(주민들의 의제를 가지고 행정과 협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)
-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마을만들기 같은 자율형 주민자치 활동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표와 주민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, 주민자치(위원)회의 규범적 정당성 확보

〈그림 1〉 주민자치의 이원적 접근 모형



● 읍·면·동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강화(예시)

① 주민참여예산제

- ‘지방재정법’에서 모든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‘주민참여예산제’를 읍·면·동 주민자치(위원)회와 통합하여 운영

② 동네발전기획(Neighborhood Development Planning)

- 주민자치회에서 국가, 시·도, 시·군계획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‘동네발전계획안’을 수립하고 주민투표에 회부해 확정함. 동네발전기획과정에 마을주민회, 아파

트주민자치회, 주민조직, 종교단체, 동네 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함

- 읍·면·동에서 주민조직 또는 대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정부의 ‘공동생산’(co-production) 관점에서 읍·면·동 기능을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함

③ 조기고지제도(Early notification system)

- 미국의 세인트 폴, 로스엔젤레스와 같은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
- 시·군·구 또는 광역지자체가 고려하고 있는 안건들을 주민자치회에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동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도록 하는 방식
-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장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며 발전시킬 합리적 수준의 시간을 가지게 됨

④ 행정의 관점 변화와 읍·면·동 기능 및 권한 강화

-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서비스 또는 공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공동생산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됨
- 읍·면·동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·면·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와 기능이 존재해야 함
- 지역사회와의 공동생산 관점에서 지방정부서비스 진단을 통해 읍·면·동의 사무와 기능을 재배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

● 자율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

① 부처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

-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·지원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의 ‘(가칭)마을만들기특별위원회’를 설치, 운영
-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조정이 어렵다면, 모든 부처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예산을 모아 기금화하고 종합행정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단위에서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에서 포괄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,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추진하되,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가능

② 상향적·자율적 주민조직화와 활동 장려 및 지원 제도 강화

- 마을만들기 이외에 일정 수의 주민이 모여 자발적으로 동네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실천에 옮기는 동네포럼(neighborhood forum)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도 실험을 장려하고 지원
- 아파트대표자회의 등 현존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- 사전 지원뿐만 아니라 ‘결과에 따른 지원’(payment by results)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

③ 읍·면·동 주민자치(위원)회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

- 자율적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경험이 읍·면·동 단위에서의 주민대표와 행정과의 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
-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마을만들기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한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거나 유인을 제공

● 지역공동체 ‘형성’과 ‘대표’(representation) 관점의 주민자치 관련법 통합 및 체계화

- 환경, 안전, 복지 등 마을만들기 사업 분야는 의제형성을 위한 기능적 성격을 띠 뿐, 각 부처 마을만들기의 공통분모는 지속가능한 동네단위 ‘지역공동체’를 형성하는 것임
- ‘주민자치’는 지역공동체 형성 과정에의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대표를 통해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
- 주민자치의 제도화 또는 입법화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대표과정을 통한 정부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
- 단계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법들은 안전행정부의 최근 추진 중인 ‘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’과 연계하여 통합·운영되어야 함
- 현 시점에서 최소한 안전행정부의 추진하는 ‘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’과 ‘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’의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관련 논의는 연계성을 갖도록 추진해야 함

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동네단위 정책실험의 강화

-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단위로 동네를 강조할 때, 주민들도 동네의 중요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
- 주민자치 맥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, 보건, 치안, 교육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전략으로서 동네를 단위로 한 ‘장소중심의 접근방식’(place-based approach)을 취할 수 있음
- 특정 취약동네의 복합적 사회문제를 중앙 또는 지방의 전체부서가 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였던 대전시의 ‘무지개프로젝트’ 또는 행정동 단위 주민조직화를 통해 차상위계층 문제 해결을 시도한 대전시의 ‘복지만두레’와 같은 사례가 동네단위 정책실험의 예가 될 수 있음

2) 지방정부 차원

● 동네주민자치 지원기구 신설

- 현재 도에 자치협력담당(계)이 있으나 주민자치 관련 사무의 비중은 높지 않음
- 도 주민자치지원과 신설 :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의 책정이나 기금의 설립 등을 관할
- 시·군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 또는 마을사업지원센터설치 : 시민단체나 자생단체 등의 협력과 역할 조정

● ‘동네자치 도민 추진 위원회’ 구성

- 아래로부터의 주민요구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참여제도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우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큼
-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 정치권과 관료의 이해타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목소리를 결집하고 동원할 필요

- 이를 위해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가칭 '동네자치 도민 추진 위원회'를 구성하여 담론의 확산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주민자치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

● 동네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강화

- 지역사회 형성 또는 주민자치의 성패는 진정성을 가진 민주적 지역사회 리더들을 발굴·양성하는데 달려 있음
-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리더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동시에 요구함
-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임
- 일회성 워크숍이 아닌 3개월 단위 중·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과정의 설치와 운영, 3개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과정 개설
- 담당공무원의 동네자치 활성화 교육과정 개설하여 동네자치의 이론과 실무, 의사소통, 갈등관리 등에 관한 기량을 교육

●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

- 지자체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주민자치 사업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민주적 가치들이 강조되어야 함
- 주민자치 사업들의 목표가 단순히 주거환경, 복지, 보건 등과 같이 물질적 삶 또는 실질적 가치(substantive values)에만 맞추어지는 경우 민주적 의사소통, 집합적 주민역량 강화와 같은 과정적·비물질적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음
- 단순히 사업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소통, 갈등관리 등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·실험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 사이의 민주적 소통과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. 

안 성 호 교수

대전대학교 행정학부

042-280-2321, shahn@dju.ac.kr

곽 현 근 교수

대전대학교 행정학부

042-280-2328, hkkwak@dju.ac.kr

※ 본 연구는 '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'(2013)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, 충남발전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◆ 참고 자료 ◆

- 곽현근. (2012). 읍·면·동 동네자치의 방향과 과제. 「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 세미나 논문집」. 한국 행정학회.
- 안성호. (2010). 다중심 거버넌스 체제의 민주적 효율성 논거. 2010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 대회 발표논문.
- 안전행정부. (2013). 「제5회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자료」. 서울: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.
- Kooiman, J. (2005). *Governing as Governance*. London: SAGE.
- Lowndes, V., and Sullivan, H. (2008). How Low Can You Go?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. *Public Administration*, 86(1): 53-74.
- Somerville, P. (2011). Multiscalarity and Neighbourhood Governance. *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*, 26(10): 81-105.

2014년도 충남리포트

| 구분 | 제 목 | 집필자 | 발행일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2014-01 | 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 | 정옥식 | 2014.01.01 |
| 2014-02 |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| 이충훈 | 2014.01.09 |
| 2014-03 | 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| 송두범 | 2014.01.21 |
| 2014-04 | 이제!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| 이상진 | 2014.01.27 |
| 2014-05 |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,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| 이민정 | 2014.01.28 |
| 2014-06 | 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 대책, 예방이 최우선이다! | 정옥식 | 2014.02.11 |
| 2014-07 | 지원·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| 이인배 | 2014.02.13 |
| 2014-08 |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| 김양중 | 2014.02.20 |
| 2014-09 | 사라지는 농촌마을! 한계(限界)마을정책 도입해야 | 조영재 | 2014.02.25 |
| 2014-10 |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| 김양중 | 2014.02.28 |
| 2014-11 |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| 이관률·정현희 | 2014.03.06 |
| 2014-12 |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| 임형빈 | 2014.03.13 |
| 2014-13 |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| 김원철 | 2014.03.27 |
| 2014-14 |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| 최병학 | 2014.04.03 |
| 2014-15 |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| 고승희 | 2014.04.16 |
| 2014-16 |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| 정옥식 | 2014.05.08 |
| 2014-17 |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| 임준홍·홍성호 | 2014.05.15 |
| 2014-18 |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·협력 추진 방안 | 오명택·김정연 | 2014.06.12 |
| 2014-19 |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| 김양중 | 2014.06.19 |
| 2014-20 |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| 송두범 | 2014.06.24 |
| 2014-21 |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| 이수철 | 2014.07.14 |
| 2014-22 |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| 이호중 | 2014.07.16 |
| 2014-23 |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·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| 이정만·고승희 | 2014.07.17 |
| 2014-24 |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| 최은희 | 2014.07.21 |
| 2014-25 |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| 김양중 | 2014.07.23 |
| 2014-26 |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| 장종익 | 2014.07.28 |
| 2014-27 |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| 주운현 | 2014.07.30 |
| 2014-28 | 충남 정책 키워드(3농혁신, 사회적경제)의 SNS 데이터 분석 | 임화진 | 2014.07.31 |
| 2014-29 |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| 유병덕·최영화 | 2014.08.05 |
| 2014-30 |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| 김양중 | 2014.08.07 |
| 2014-31 |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| 박철희 | 2014.08.11 |
| 2014-32 |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| 김찬규 외 | 2014.08.21 |
| 2014-33 | 지방 3.0 시대,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| 정창수 | 2014.09.11 |
| 2014-34 |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| 김순은 | 2014.09.16 |
| 2014-35 |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| 박 경 | 2014.09.18 |
| 2014-36 |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| 김흥기 | 2014.09.23 |
| 2014-37 | 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| 김용현 | 2014.09.25 |
| 2014-38 |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| 변창흠 | 2014.09.30 |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■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